
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4. 1.

 부산지방해양수산청



목 차



I. 일반현황	1
II. 2023년 성과와 평가	3
III. 2024년 정책 여건과 전망	6
IV. 2024년 업무추진 방향	8
V. 주요업무 추진계획	9
1.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·해양환경 조성	9
2. 글로벌 허브항만 기반 확충	15
3. 이용자 중심의 해양공간 조성 및 해양문화 확산	17
4.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	20
5. 제주해역 교통안전 확보 및 깨끗한 바다 조성	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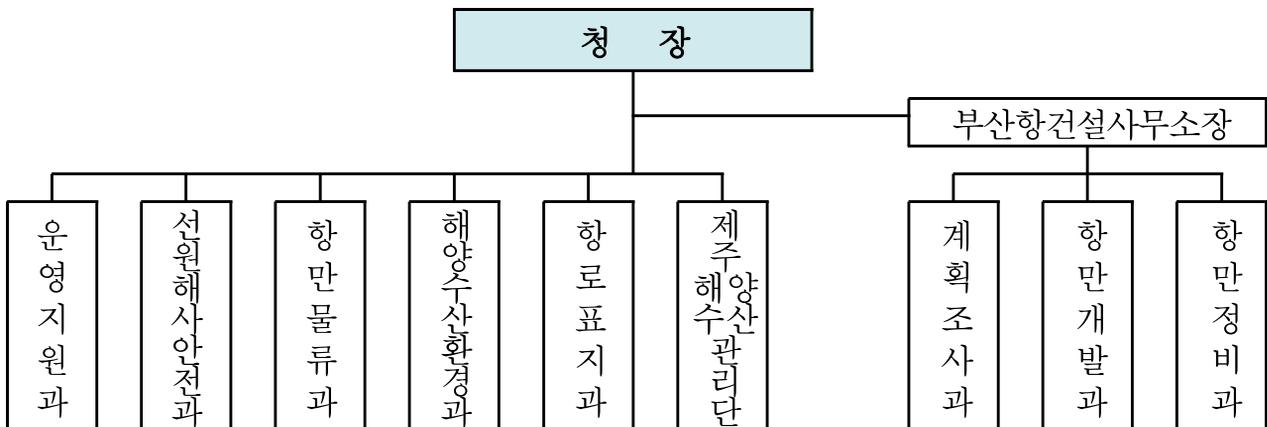
I. 일반현황

1 주요 소관업무

- ◆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시설 기능 강화
- ◆ 해운, 항만, 물류산업 육성·지원 및 선원해사 안전관리
- ◆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문화·관광·레저 활성화
- ◆ 어업인 현장 행정지원 및 다기능 어항 건설

2 조 직

□ 기구 : 5과 1단 1사무소(3과)



* 부산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개소 예정('24.上) : 5명

□ 인원 (정원/현원)

(단위 : 명)

구분	계	고공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	7~9급	관리 운영직
합계	236/227.5	2/1	1/0	5/6	3/3	26/25	76/73	119/115.5	4/4
부산청	151/150.5	1/0	1/0	2/3	2/2	14/13	50/53	79/77.5	2/2
부건소	37/35	1/1	-	3/3	0/0	8/8	11/8	12/13	2/2
제주단	48/42	-	-	0/0	1/1	4/4	15/12	28/25	0/0

* 청경(142/142명) 별도 (제주단 141/141명, 부건소 1/1명)

3 예산 현황

□ **[총괄]** '24년 예산은 6,087억원으로 전년 대비 78.6% 증가

□ **[주요사업비]** 5,823억원으로 전년 예산(3,151억원) 대비 84.8% 증가

○ 신항만 개발 4,642억원, 북항재개발 226억원, 표지시설 67억원 등

* 신항만 개발(1,942억원→4,642억원) : 진해신항 어업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(2,700억원)

(단위 : 억원)

구분	프로그램 (단위사업)	'22년	'23년(A)	'24년(B)	증감	
					B-A	(%)
총계 : ㉞+㉟		3,270	3,409	6,087	2,678	78.6
㉞ 인건비·기본경비		253	258	264	6	2.3
㉟ 주요사업비(합계)		3,017	3,151	5,823	2,672	84.8
일반회계	소계	128	240	319	79	32.9
	해양환경보전	101	215	264	49	22.8
	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	1	0.4	-	△0.4	△100
	항만물류정보화	12	14	18	4	28.6
	관공선 건조 및 운영	12	9	35	26	288.9
	해양및해상교통안전	2	2	2	-	-
교통시설 특별회계	소계	2,556	2,636	5,242	2,606	98.9
	신항만 개발	1,207	1,942	4,642	2,700	139.0
	부산항	61	84	94	10	11.9
	부산북항재개발	819	328	226	△102	△31.1
	일반항	1	1	1	-	-
	태풍피해복구(항만)	285	32	-	△32	△100
	항만시설유지보수	43	155	185	30	19.4
	항만보안시설	42	28	27	△1	△3.6
	표지시설	98	66	67	1	1.5
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	소계	257	137	82	△55	△40.1
	유류비보조	257	137	82	△55	△40.1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	소계	76	138	180	42	30.4
	국가어항	71	133	175	42	31.6
	어업경영체등록	5	5	5	-	-

Ⅱ. 2023년 성과와 평가

①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운영 여건 조성

- 안전한 항만하역 근로환경 조성
 - 사업장(53개社)별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및 계획서 수정·보완
 - 항만안전사고 예방,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“항만안전문화주간”(7월,12월) “항만안전협의체”(분기별) 운영
 - 항만출입자 항만교육 의무화로 안전문화 확산
 - * 항만 출입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, 항만출입증 발급(재발급)과 연계하여 교육이수 독려 지원
 - 항만 배후단지 안전관리체계 취약 사업장 지도 점검(69개社)(月 6개社)
 - * 안전관리체계 취약 배후단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
- 부산항 입항 외항선에 대해 연료유의 유황 성분을 지속적으로 점검('23년 90척)하여 부산항 대기질 환경 개선 추진
 - * 저유황유(0.1% 이하) 연료의 샘플 채취 후 시험 기관(한국석유관리원)에 분석 의뢰
- 운송 및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추진(Y/T 36대, T/C 6대)
 - * (Y/T) '23.말 기준 91% 친환경 전환 (Y/T 700대 중 537대 전환, 81대 DPF 부착)
 - ** (T/C) '23.말 기준 98% 친환경 전환 (T/C 400대 중 366대 전기T/C 전환, 25대 DPF 부착)
- 선박방충재에 소유자 실명 표기를 통해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유실을 방지하여 침적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
 - * '23년 참여실적 : 총 118척(항만예선 47, 관공선 58, 도선선 13)·타이어 2,325개

☞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 조성을 위하여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항만안전문화 확산

② 스마트 물류허브항만 육성을 위한 진해신항개발 기반 조성

- 남방과제 등 정부부문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순차적 발주*

* ('23.4.) 남방파제 → ('23.9.) 투기장(1공구) → ('23.10.) 투기장(2공구) → ('23.11.) 남측 방파호안(2공구) → ('24.上) 남측 방파호안(1공구)

- 진해신항 개발에 필요한 대형 케이슨 제작장* 조성공사 우선 시행('23.7. 착공)

* 케이슨제작장 29,500㎡, '22.~'25., 315억원('24년 178억원)

○ 진해신항 개발에 필요한 토석의 적기 공급과 서컨'부두 자동화터미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송도개발 예타 통과('23.10.)

* 송도제거 1,174만㎡, 부지조성 27만㎡ / '24.~'28. / 2,063억원 / B/C 0.94, AHP 0.530

☞ 정부부처 기반시설의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여 스마트 물류허브항만 조성 기반 지원

③ 연안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편의 증대

○ 공유수면 점·사용 변경허가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불법행위 단속 강화

○ 공유수면 점·사용 및 매립면허 구역 실태조사*(11월) 등을 통해 효율적 연안관리 도모

* 점·사용허가 12개소, 매립면허 준공(10년 미경과) 7개소

○ 부산지역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후속조치* 및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** 실시

* 오륙도 주변해역 및 나무섬·남형제섬 주변해역의 수산종자 매입·방류, 홍보물품 제작 배포

** 관내 무인도서 38개소 점검(총7회 / 진우도 등 7개소 지자체 합동점검 1회, 영해기점 무인도서 1.5미터암 해양조사협회 합동 점검 1회 포함)

○ 태풍 등 이상 고파랑 내습으로부터 배후지 침수 및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

- 다대포해안 동측지구* 및 영도 감지2지구**, 기장 임랑~문동지구*** 계속 시행

* 수중방파제 220m, 양빈 63천㎡ / '15.4.~'24.8. / 285억원(공사 중)

** 이안제 240m, 호안 282m / '21.3.~'26.2. / 375억원(공사 중)

*** 수중방파제 360m, 돌제 200m 등 / '22.3.~'28.12. / 403억원(설계 중)

☞ 공유수면, 연안육역(무인도서 등)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공간 보전,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안전·쾌적한 친수공간 조성

④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국민불안 해소

- 부산지역 수산물 안전대책 설명회* 개최, 기업·단체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 MOU 체결**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
 - * 지역수협 조합장 간담회(6.15), 향운노조 간담회(6.20), 어업인 대상 수산물 안전관리 설명회(6.21)
 - ** 기술보증기금, HJ중공업, 부산테크노파크, 한국남부발전, 부산합동양조 등 13개 기관(기업) 동참
- 일본 원전 오염수 본격 방류('23.8.24.~) 이후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유입 차단을 위해 **연중 24시간 조사·검사**(총 17척)
 - * 후쿠시마 인근 항만(6개현, 39개항)으로부터 방사능물질(세슘134, 137, 삼중수소) 유입 차단

☞ 수산물 안전대책 등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철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로 국민 불안 해소와 우리 바다·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 제고

⑤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·맞춤형 해상안전관리

-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('22~'26)과 연계한 '23년 부산청 해사안전 시행계획('22.10)을 수립하고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(분기) 시행
 - 계절별 특성과 선종별 취약요인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·시행을 통한 부산항 안전관리 강화 도모(연 4회)
- 지능형 해상교통정보(바다 내비)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맞춤형 정보* 제공
 - * (어선) 접경수역 위험정보, (여객선) 항행 장애물 신고 공유, (레저기구) 레저금지구역
- 해상교통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정책수요자와 소통을 통한 항로표지 개량, 확충 및 재배치*
 - * (개량) 등대 2, 등표 1, 영도등대 휴게등 1 / (확충) 등주 5, 가상 AIS 1 / (재배치) 등주 6
 -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항로표지 만족도* 5년 연속 상승
 - * '18년 77.4점 → '19년 78.4점 → '20년 79.8점 → '21년 80.3점 → '22년 82.3점 → '23년 84.6점

☞ 현장 환경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정책 역량 집중

Ⅲ. 2024년 정책 여건과 전망

1 국내·외 경제여건

□ (세계경제) 고물가·고금리,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둔화되고, 상품무역도 반등하나 예전만 못할 전망

* IMF/KIEP 경제성장률 전망(%) : ('22) 3.5/3.3 → ('23^e) 3.0/3.0 → ('24^e) 2.9/2.8
IMF 세계무역 성장률 전망(%) : ('22) 5.1 → ('23^e) 0.9 → ('24^e) 3.5 / '00~'19 평균 4.9%

- 美·EU 등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 유지, 중국의 성장세 둔화 전망

* 선진국/중국 경제성장률 전망(%) : ('22) 2.6/3.0 → ('23^e) 1.5/5.0 → ('24^e) 1.4/4.2

□ (국내경제) 美·EU 중심의 對中 디리스팅 전략, 생산기지 이전(온·니어 쇼어링 등) 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시 우리나라에 큰 영향*

* IMF는 중국·선진국간 디리스팅시 GDP가 中 6.8%, 韓 약 4%, 그 외 2% 감소 경고

- 아울러, 고금리 장기화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,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이-하마스 사태 등 불확실성 증대

2 분야별 전망

□ (해운·항만) '23년 '퀵' 운임지수는 고점('22.1, 5,110pt) 대비 약 80% 하락한 1,000pt대에서 등락, 선복량 증가 등으로 불황기 장기화 우려

○ (선사대응) 글로벌 선사는 늘어난 유동성을 선박·터미널 등에 재투자*한 반면, 국적선사는 대체로 안전자산으로 보유, 친환경 전환도 관망세

* (MSC) 발주잔량 150만TEU, 항만운영사(HHLA) 인수 추진 (CMA-CGM) 발주잔량 127만TEU 등

○ (부산항) '23년도 '퀵' 물동량은 2,275만TEU 달성*(전년비 3.1% ↑), '24년도 목표**는 전년대비 2.8% 증가한 2,340만TEU

* '23년 BPA 실적 : 2,275만TEU (수출입 1,061만TEU, 2.9% ↑ / 환적 1,214만TEU, 3.2% ↑)

** '24년 BPA 목표 : 2,340만TEU (수출입 1,077만TEU, 1.5% ↑ / 환적 1,263만TEU, 4.0% ↑)

□ (해사안전) 해양안전 저해요소 증가,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책수요의 증대 및 국제 안전·환경규제 강화 가속화

○ 기후위기·대형재난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고 국가책무 강화 요구 증대에 따라 재난대응체계의 지속적 점검·개편 필요

○ 다중이용선박(국제여객선, 크루즈선)의 운항 재개*·증회로 인한 이용객 증가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관리 필요성 증가

* 한·일 여객운송 재개 : 오사카('22.11월), 시모노세키·후쿠오카('22.12월), 대마도('23.2월)

○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(서울면적 4배, 12GW), 레저활동 증가 등 복잡·다변화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안전관리 수요 증가

○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,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환경규제* 강화

* 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('20.1~ , 0.5%), ② 배출규제해역 설정·운용('20.9~ , 0.1%),

③ 선박 에너지효율(EEXI/CII) 규제 시행('23.1~) ④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 논의('23.7)

□ (해양환경)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, 日 원전 오염수 장기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방안 필요

○ MZ 세대 영향력 증가*, 코로나 팬데믹 이후 로컬관광, 아웃도어 레저, 체류형 여행 등 휴식·레저형 관광 수요 증가(한국관광공사, '23)

* MZ세대 해양관광 지출액 : 20대 198,427원, 30대 186,220원, 평균 177,760원

○ UN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'30년까지 해양면적의 30%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, 우리나라는 1.8% 수준*으로 대규모 확대 필요

*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: 1.81%(보호구역면적(7,948) / 해양면적(438,991km²))

○ 日 원전 오염수의 장기 방류(약 30년)로 해양생태계, 국민건강 등 영향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노력* 지속 필요

* 선박평형수를 통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수산물 소비 동향 모니터링

IV. 2024년 업무추진 방향

안전하고 깨끗한 동북아 물류 중심 스마트 항만

해양사고 제로화 및
해양안전 인식 확립

글로벌 허브항만 도약을
위한 신항만 지속 개발

해양관광·문화가 융합된
신 해양공간 조성



추진방향

추진과제

1

안전하고 깨끗한
항만·해양환경 조성

- ① 모든 이용자가 안전한 부산항 운영·관리
- ② 부산항 항행안전 및 해상교통 편의 제고
- ③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해양환경 조성
- ④ 지속가능한 녹색 항만 관리체계 구축
- ⑤ 항만보안 체계 효율화 및 보안관리 강화

2

글로벌 허브항만 기반
지속 확충

- ① 스마트 허브항만 육성을 위한 부산항
신항·진해신항 개발
- ② 안정적 항만운업을 위한 항만시설 유지보수
- ③ 효율적 항만운업을 위한 민·관·연 소통

3

이용자 중심의 해양공간
조성 및 해양문화 확산

- ① 자연친화적 연안공간 조성
- ②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및 제도 정비
- ③ 해양친화적 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
교육과 홍보
- ④ 부산항 경관을 시민친화적으로 재정비

4

현장 중심의 맞춤형
행정서비스 구현

- ① 해양수산업 종사자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
- ② 선원 권익 향상·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강화
- ③ 수요자 중심의 어업인 지원 제도 운영 및
어항시설 확충

5

제주해역 교통안전 확보
및 깨끗한 바다 조성

- 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
- ② 항로표지시설 기능을 개량하여 안전한 통항
환경 조성
- ③ 밀입국, 테러 예방을 위한 항만보안활동 강화
- ④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

V.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1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·해양환경 조성

- ◆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으로 항만근로자, 항만시설이용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시설·항만사업장 구축 지원

① 모든 이용자가 안전한 부산항 운영·관리

- 현장중심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관리체계 구축
 -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협의체*와 하역단계 안전관리·공동대응 위한 부산항 위험물 안전관리협의체** 운영(분기별)
 - * 관계기관 의견수렴·개선 대책 논의 및 '항만안전문화주간' 운영
 - ** 우리청, 부산소방재난본부, 세관, 환경청, 부산항만공사, 해사위험물검사원 및 위험물 하역업체
 -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점검(53개社)(月 13개사) 실시 및 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
- “중대시민재해” 예방 공중이용시설*(항만시설 9개소) 안전관리
 - *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·파제제·방파제 기능을 하는 호안,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 등
 - (신항 웅동 외곽 투기장 호안) 안전펜스 미설치 구간 안전난간 설치 추진
 - * 일부 미설치 구간 설치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및 안전난간 설치('24.上)
 - (감천항 동·서방파제) 안전시설물 파손 상태 확인 및 보수·보강 실시
 - * 동방파제 항내·항외측 및 도류제 인근 안전시설물 결손·파손 상태 점검 및 보수 실시
- 현장점검을 통한 해양환경 분야 사고 사전예방
 - 부산항 내 해양시설(유류저장시설·선가대 등 37개소) 안전점검 실시로 사고위험 요소 사전 제거
 - * 정기점검(연 1회, 37개소 전체), 자체점검(연 2회, 기름저장시설 11개소)
 - 평시 도상훈련 실시와 방제자재 확보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고, 유사시에는 위기관리지침에 따라 신속 조치
 - * 중대한 상황(지속성기름 100kl 유출 등) 발생 시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·운영

② 부산항 항행안전 및 해상교통 편의 제고

- 해양사고 예방을 통한 부산항 항행안전 제고
 -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('22~'26)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부산항 해양안전 여건을 반영한 해사안전시행계획(3차년도) 수립·시행
 - 민원소통 및 행정지원* 강화로 지원사업장** 및 취약선박(예·부선 등)에 대한 산업안전사고 취약 요소 사전제거
 - * 지정사업장 애로사항(정비인력 보충, 운영 등)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
 - ** 선체 두께측정업체(10개사), 지정사업장(17개사), 컨테이너 소유주(16개사) 총 43개사
 - 항만 내 미허가 선박용접작업 등 특별단속(반기), 외국적 선박 화물 고박장치·선내 화재설비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(반기)
- 내항선, 원양어선(사업장)에 대한 해사안전관리 지도·감독 강화
 - 관내 운항 급유선 등 위험물운반선*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(연중)
 - * 본부(해사안전정책과)에서 지정한 위험물운반선 총 276척 중 부산항 관내 **188척** 점검
 - 내항화물선 선종별 위험도평가 하위* 10% 선박에 대한 중점 관리
 - * 평가 하위 10% 선박 특별점검(봄철 농무기, 겨울철 화재예방 등) 및 불시점검시 우선점검
 - 베링해/북태평양 출어 원양어선의 관계기관 합동 점검(5~6월)
 - * 우리부, 조업감시센터, 한국선급, 선박안전기술공단, 원양산업협회
-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관리 강화
 - (시설물 개선) 감천항 도등 대체시설* 설치, 노후 항로표지(5개소) 안전진단을 통한 개량 및 항로표지 재도장(17개소) 등 기능강화 추진
 - * 부지 소유주의 도등 철거 요구 및 이용자의 존치 요청에 따라 대체시설(이중 지향등) 운용 검토
 - (이용자 소통) 간담회,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 소통강화를 통해 현장 실정에 적합한 항로표지 설치 및 재배치 추진
 - (신뢰성 강화) 전국 항로표지 고시 기능측정(83기), 동해권 등부표(65기) 정기교체 및 무인표지 관리등급(1·2·3등급)에 따른 정기점검

- (신기술 적용) 부표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 가상(Virtual)표지 운용, 드론 기반 항로표지 신속 점검, AI 자동 식별 장치* 및 감지 센서** 도입

* 영상감시시스템(CCTV)에 자동분석 기능 추가

** 선박 추돌 감지 센서 도입

○ **바다 내비(e-Nav)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로 해양 안전·편의 제공**

- 항로 안내 지원(1개 → 2~3개 항로검색 가능), 어군탐지 기능 연계, 연안여객선(120척) 원격 모니터링(항로이탈시 알람 제공) 등

* 단말기 화면 확대(10인치→13.3인치), 소형 송수신기 등 이용자 맞춤형 신형단말기 본격 보급

- 기존 항해 안전 지원서비스(SOS, 교량 충돌·좌초 경고 등) 외 **해양안전 음성정보*** 추가 제공으로 복지 혜택 확대

* 돌발 교통 정보(부유물 발생), 안개·줄음 주의, 행락철 교통량 증가,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등

- 이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바다 내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추진(연 32회)

* 보급대상: ('21~'23년) 어선, ('24년, 6차) 어선 및 비어선(일반선박, 레저기구 등)

③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해양환경 조성

○ **해양이용개발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**

-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**해역이용협의·영향평가**로 지속 가능한 부산항 개발환경 조성

* 항만시설 설치·공유수면 점용 시 협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

- 사업장별 **협의의견 준수** 여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 능력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협의제도의 **실효성과 전문성 제고**

* 사후관리조사 및 현지조사(우리청, 연중 수시), 해양환경영향조사(사업자, 반기)

○ **누구나 찾고 싶은 깨끗한 부산항 환경 관리**

- 부산연안 부유쓰레기를 상시 수거*(총 4척, KOEM 위탁)하고 **노후 청항선 대체선****을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형태로 건조 추진

* 평시는 북항 3척·신항 1척을 배치하고, 상황에 따라 감천항 등으로 이동 배치

** 사업기간/예산액/규모 : '24~'25년 / 7,000백만원 / 100톤급

- 북항 해양수질 개선을 위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3년차 사업을 1분기내 완료하고 4년차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

* (기간/총사업비) '21~'25년 / 370억원, 물량 455,418m³('24년 103억원, 물량 131,291m³)

○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

-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오륙도 및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('24~'28) 수립('24.1분기)

- 오륙도·나무섬·남형제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각종 관리사업*을 협업

* 지역관리위원회 운영, 안내판 설치·보수, 수산종자 방류, 교육홍보 등

○ 해양생물과 시민과의 공존 환경 조성

- 동물원수족관법 개정·시행('23.12)으로 공공시설*의 수족관 관리·감독 권한이 지방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

* 부산지역은 1개소(국립해양박물관, '12년 개관)

- 수족관 내 해양생물에 대한 행위금지*, 질병·안전 관리, 근무인력 교육 등 법정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해 정기·수시 점검 강화

* 올라타기, 만지기, 먹이주기 등 사전 미허가 교육활동

4 지속가능한 녹색 항만 관리체계 구축

○ 친환경 항만구축을 위한 항만대기질 개선 추진

- 육상전원공급설비(AMP) 이용시 전기요금(기본료) 및 접안·정박료 감면(15%) 등 AMP 이용 활성화 방안 지속

* 고압 AMP 설치 현황 : 신항 3·4부두 각 2선석 / 북항 감만·신선대부두 각 2선석

** 소형선 부두 AMP 설치 확대를 위한 전력 증설 공사 실시

-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흡착 직물 부착 시범 운영

* BPA 항만청소차(4대) 부착 및 흡착직물 재질 계절관리제 홍보용 배너(13매) 설치

- 대기오염측정소*를 활용하여 부산항 전반의 (초)미세먼지 농도를 측정,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·활용
 - * 부산항 미세먼지 측정망: 21개소(신항 7개소, 감천항 4개소, 북항 10개소)
- 관계기관(낙동강유역환경청, 부산시, BPA) 협의회를 개최(반기별)하고, 기관별 주요 정책 공유 및 공동사업* 발굴·추진
 - *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망 확충 및 관리,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등
- 최신 대기오염방지 국제협약(MARPOL Annex VI) 적용에 따른 규제 적용
 - 에너지효율 규제*(3분기) 및 선박 연료유 황산화물 배출규제**(연중) 점검
 - * 탄소집약도지수 E 평가등급 선박 시정조치 계획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개정 확인
 - ** 국내 황산화물 배출구역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(0.1% 이하) 준수 확인
- 선박 평형수를 통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부산항 유입 방지
 - 미배출선박의 경우 원격점검, 배출 선박의 경우 승선 점검* 실시
 - * 서류점검 및 평형수 견본을 채취하여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 이용 전수조사 실시
 - ** 세슘134, 137 현장 분석(오르비텍), 삼중수소 정밀(실험실) 분석(해양환경공단)
- IMO(MEPC)* 해사분야 글로벌 환경 규제 공유 및 민·관 공동 대응
 - * 국제해사기구 내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)
 - 국제선의 이행적합성 확인 및 상호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및 연구회* 운영
 - * 참여기관(해운회사, 한국선급, 한국해대, 한국해사협력센터, 해양수산연수원)

⑤ 항만보안 체계 효율화 및 보안관리 강화

- 부산항 보안체계 개선 추진
 - 현행 부산 항만보안 관리체계 미비점 개선을 위해 부산신항 보안업무 전담법인 신규 설립 등 보안체계 개선 추진
 - * BPA, 운영사 등 협의('24.1.~2.) → 전담법인 설립 등 용역 추진('24.3.~8.) → 부산신항 보안체계 개선(안) 마련('24.9.~10.) → 법인 설립 등 추진('24.11.~)
 - 항만시설보안료 제도 도입('10년) 이후 동결된 보안료 단계적 인상 및 선박·화물 보안료 통합징수 체계 개선 추진(본부 주관)

○ 신종 사이버 위협 대비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항만보안 역량 강화

- 스마트항만 확산에 따른 정보유출·해킹 등 사이버공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('24.上) 및 불법 드론 탐지·무력화 시스템* 구축('24~'25)

* BPA와 공동으로 3개 권역(북항, 감천항, 신항)에 20개 장비(RF스캐너, 레이더, EO/IR카메라, 재머) 설치(총 사업비 67.9억원, 국비 50%, BPA 50%)

○ 부산항 경비·보안 실태 점검 추진을 통한 보안관리 강화

-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을 위해 대응체계 시설·장비 및 보안인력 근무실태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

*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('16.2.25.)에서 확정된 「항만보안 강화방안」에 따라 '16년부터 관계부처 공조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추진

** (상반기)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점검('24.6.) / (하반기) 부산항 신항 점검('24.10.)

◆ 부산항 항만 인프라의 지속적인 유지·보수·확충 및 부산항 신항·진해신항 적기 개발

1 스마트 허브항만 육성을 위한 부산항 신항·진해신항 개발

- (인프라 확충) 외곽(방파제, 투기장, 외곽호안)·수역시설(항로 등) 확보, '컨'부두(1-1단계 3선석) 조성 등 기반 인프라 적기 확충
 - (외곽시설) 항만 내 정온확보 등을 위해 외곽시설*(방파제 등 5건) 착공
 - * (착공 일정) 남방파제('24.7.), 준설토투기장(1공구)('24.10.), 준설토투기장(2공구)('24.11.), 남측 방파호안(2공구)('24.12.), 남측 방파호안(1공구)('25.上)
 - ('컨'부두) '32년까지 '컨'부두 9선석('29년 3선석, '32년 6선석) 개장을 위해 진해신항 '컨'부두(1-1단계) 발주(1공구 '24.上/ 2공구 '24.下) 및 착공('25.)
 - * 8천TEU급 3선석, 안벽 1,390m, 부지조성 200만㎡ / '24.~'29. / 1조4,231억원 / BPA
 - (기반시설) 복합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, 대형 선박 입출항을 위한 준설투(ΔL(-)20.5m),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항도로 계획 마련
 - * (서컨배후단지) 실시설계 1식, '24.~'25., 50억원('24. 3억원) / (개발준설투) 실시설계 1식, '24.~'25., 40억원('24. 0.2억원) / (임항도로) 기본설계 1식, '24.~'25., 5억원('24. 3억원)
-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부산항 신항 경쟁력 제고
 - ('컨'부두) 서'컨' 2-5단계 3선석(BPA, '24.上), 서'컨' 2-6단계 2선석(BPA, '26.), 피더부두(BPA, '25.) 등 신항 '컨' 부두(31선석) 지속 조성 추진
 - * (서'컨'2-5) 안벽 1,050m / '12.8.~'23.9. / 1조1,407억원
 - ** (서'컨'2-6) 안벽 700m / '19.8.~'24.8. / 9,300억원
 - *** (피더부두) 안벽 384m / '21.7.~'25.8. / 950억원
 - (배후단지) 남'컨' 배후단지 사업완료 공고 및 운영을 위한 시설물 이관을 추진하고 배후단지 개발(웅동 2단계 및 북'컨' 2단계) 지속 추진
 - * 남'컨' 배후단지 116만㎡(3,794억원, '16.~'24.) / 북'컨' 배후단지 52만㎡(7,825억원, '23.~'35., BPA) / 웅동 배후단지 85만㎡(2,517억원, '23.~'27., 부산신항웅동개발㈜)

- (종합서비스) 부산항 신항 서비스 다변화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양곡부두 이전·신설, 수리조선 서비스 제공 및 피더·잡화부두 추진
 - * (양곡부두) '23년 협상 마무리, '24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(수리조선소) 제3차 공고 중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 조정결과 후 공고 재개 (피더·잡화) 현재 PIMAC(공공투자관리센터) 적격성조사 시행·대응
- (기타) 남'컨' 진입도로를 통해 배후 교통망 개선, 방재언덕 건설 및 용원수로 정비 등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 여건 개선
 - * 도로 0.7km(487억, '18.~'24.) / 방재언덕 400m(454억, '18.~'24.) / 수로 정비 1식(270억, '21.~'26.)

② 안정적 항만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 및 보강

- 부산항 북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항만기능 효율화
 -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공선 이전을 위한 북항 파제제* 설치 및 부산 해양경찰서 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해경 소형선부두** 확충 추진
 - * 파제제 400m, 492억원, '22.~'27. / ** 해경함정 접안시설 230m, 308억원, '23.~'27.
- 기후변화 대비 항만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
 - 이상파랑에 따른 용호부두 시설물 보호를 위한 외곽시설 월파방지공사 및 부산항 외곽시설의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 - * 외곽시설(방파호안) 월파방지공 1식 / 7억원 / '23.~'24.
 - ** 부산항 외곽시설(조도·오륙도·감천항 방파제) 안정성검토 1식 / 12억원 / '22.5.~'24.10.

③ 효율적 항만운영을 위한 민·관·연 소통

- 부산항의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해양수산발전 정책 방향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“부산청-KMI 정책연구협의회” 운영
 - KMI 수시연구 과제 내 부산청 제안 반영, 정례 정책세미나 개최, KMI 정기간행물 공유, 부산항 투자효과 분석 등 정책연구 발굴
-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* 육성·발굴을 위한 배후단지 간담회** 실시
 - * (배후단지 관리규정) 조립, 가공, 분류, 라벨링, 분해, 수리, 세척, 검사, 포장, 전시판매
 - ** 부산청, BPA, 경자청, 세관, 부산신항물류협회,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등

- ◆ 바다를 시민 친화적인 여가·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양 보전 인식 확대를 위해 연안 정비·조성 및 해양교육·체험기회 확대

① 자연친화적 연안공간 조성

-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침식 예방 및 복구를 통해 해양관광지를 복원하고,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추진
 - (다대포해안) 잘피이식 및 해역특성을 고려한 양빈 완료 등 전체 준공
 - * 수중방파제 220m, 양빈 63천㎡ / 285억원('24년 49억원) / '15.4.~'24.8.
 - (감지 2지구)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이안제 시공(블록제작 및 거치 등) 본격 추진
 - * 이안제 240m, 호안 282m / 375억원('24년 95억원) / '21.3.~'26.2.
 - (임랑~문동지구) 해수욕장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 착공
 - * 수중방파제 360m, 돌제 200m / 403억원('24년 10억원) / '22.3.~'28.12.

②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및 제도 정비

- 마리나선박 대여업·수중레저업 이용자 안전 확보
 - (마리나) 여름철 성수기 전 요트·보트 안전* 및 대여업 준수사항 점검
 - * 법정 15개 항목(항해·통신장비, 구명·소화설비 등) 점검 후 시정조치 등 실시
 - (수중레저) 성수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합동점검(5월, 해경 등) 및 정기점검(8~9월, 수중레저교육단체 전문가 및 해경) 실시
-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개장 전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(6월)
 - * 관내 해수욕장 7개소(해운대, 광안리, 송도, 송정, 다대포, 일광, 임랑)
 - '24년 우수 해수욕장 선정 등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업으로 해수욕장 시설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반영한 불편사항 개선(7~8월)
 - * '23년 우수 해수욕장 : 변산·사촌·꽃지 해수욕장

- 국제 해양관광 거점개발을 위한 **북항재개발 사업** 지속 추진
 - (1단계*) 기 조성 공공시설 이관** 및 잔여사업인 공공컨텐츠, 마리나, 트램 등*** 주요 핵심 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업무 지속 추진
 - * 부지조성 155만㎡(육상 113만㎡, 해상 42만㎡) / 2조 8,970억원 / '08.~'27. / BPA
 - ** 공원('23.11. 완료), 도로('24.1. 완료), 보행데크·지하주차장('24.上 예정)
 - *** 공공컨텐츠, 마리나 등은 '24년(1-3단계), 트램은 '27년(1-4단계)까지 추진
 - (2단계)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실시계획 수립 등 2단계 사업 적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
 - * 부지조성 228만㎡(육상 157만㎡, 해상 71만㎡) / 4조 636억원(재정 3,043억원) / '20.~'30. / BPA, 부산시(추가 예정 - LH, 부산도시공사, 코레일)
 - 지하차도는 불규칙한 지반특성 등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해 작업구간 추가확보 및 인력·장비 최대 투입을 통해 구조물공사 완료 추진
 - * 도로 1.94km(지하차도 1.86km) / 2,692억원('24년 200억원) / '19.10.~'25.7.

③ 해양친화적 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

- 지역 기반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 발굴
 - (찾아가는 해양교실)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가 직접 일선 학교를 방문*하는 형식의 원스톱 해양교육 실시
 - * 해양환경 이동교실, 해양수산 전문가 학교 방문 등
 - (현장체험 프로그램)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특수 선박과 항만 내 시설 등을 체험*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 운영
 - * 항만예선 소화·구명설비 작동 체험, 청항선 해양쓰레기 수거 체험 등
- 우리청·부산시·부산항만공사가 공동 개최하는 부산항 축제에서 어린이·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행사* 실시
 - * 모형배 만들기, 부산항투어, 선박공개행사, 어린이 글짓기 대회 등

- 전생애 해양안전 교육 실시를 통해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 추진
 - (방선교육) 선원 대상 각종 자료(팜플렛, VR장비) 이용 및 해양사고 사례공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 실시
 - (집합교육) 해양수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협업하여 해양안전 교육(중대재해사고예방법)에 관한 교육 진행
 - 부산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「제 11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」을 추진, 수상작을 활용하여 해양안전 캠페인 등 홍보 확대
 - (홍보 확대) 수상작을 활용한 전시회 운영, 타 과 및 소에 간행물 기초자료로 제공 및 해양안전 달력 제작·배포 등
 - (현장교육) 진로 체험 및 현장실무 교육 등 미래해양인 양성 확대 시행
 - 수요조사를 통해 미래해양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수요*에 적극 대응
- * 진로체험(해양계 대학, 오션폴리텍, 해사고 등), 선원교육(선사, 해양환경관리공단 등)

4 부산항 경관을 시민친화적으로 재정비

- 부산항을 미항으로 변모시키고자 항만시설에 공공디자인(채색, 조명, 조형물 등)을 도입*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랜드마크로 개발
 - * 기존 경제성만 강조했던 항만시설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친수시설 등 시민 및 관광객 친화형 시설물 설치
 - 등대 관련 다양한 체험·볼거리 제공,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등대를 해양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
 - * 유인등대(영도·가덕도): 등대체험숙소 및 등대문화해설사 운용 및 편의 공간 확충 / 무인표지(조형 및 특색있는 등대): 시설물 정비, 분수 및 조명 등 추가설치
 - 항로표지시설 경관 재정비 추진
 - 송도조형입표, 조형등대를 재정비하고 무인표지(육상전원 운영)에 로고라이트, 터치라이트(가칭)* 설치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
- * 관람객들이 바닥에 투영된 빛을 터치하면 콘텐츠가 변화됨

◆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어업인 등 해양수산업 종사자 편의 증진

① 해양수산업 종사자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

- 공유수면 점용·사용자(200개소) 대상 사전 행정서비스*를 제공하고, 허가 검토 시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갈등 및 민원을 예방
 - * 허가 기간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기한, 기간연장 절차 등 사전(모바일, 우편 등) 안내
- 유가 급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내항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* 강화로 선사 경영안정 도모
 - 해운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업 및 설명회를 통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률 제고
 - * 관내 279개사 중 '23년 4분기 동안 매 분기 평균 32개 업체만 신청(영세업체는 미신청)
- BPA, CIQ 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 국제여객선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등 여객이용 활성화 지원(상·하반기)
 - 선사, BPA(부산항 시설관리센터), CIQ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여객편의 및 안전관리 제고 방안 지속 협의

② 선원 권익 향상·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강화

- 업종별·취약시기별 근로감독으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로 선원 권익 향상
 - 업종별 정기 선원 근로감독(6회) 및 취약시기(설·추석) 특별 지도감독(2회)
 - * 근로기준 불부합 사업장 대상 간담회 추진(상반기), 상습 체불업체 방문 지도점검 등
- 외국인 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강화
 - 원양어선 정기점검 확대 및 휴대전화, SNS를 활용한 수시점검 실시
 - * 원양어선 (연 2회→연 4회), 수시 점검 시 임금체불, 인권침해 등 응답 발생 시 세부조사
- 선원 근로 및 생활조건과 관련한 선상 노동분쟁 발생, 외국항에서 해사노동협약 관련 출항정지 처분 시 특별인증검사 시행

- 민원업무 전산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*로 배송비용을 감소하고 서류도착 지연에 따른 출항정지 사전예방

* 연평균 약 416건 (최근 3년 실적 : '20(371), '21(428), '22(450))

③ 수요자 중심의 어업인 지원 제도 운영 및 어항시설 확충

- 어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운영·관리
 - 부산 관내 어촌계 대상 집중 안내를 통해 미등록 어가 최소화
 - * 누적등록(신규+상시) 실적('23.12.기준) : 2,336건(어업인 2,330건, 어업법인 6건)
 - 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(3년) 도래자 대상으로 등록된 어업경영체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 상시조사 추진, 등록정보 최신화
 - * 상시조사 목표건수 : ('23년) 610건→ ('24년) 700건
- 사전 이행점검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투명한 수산직불제 집행
 - 지급 전 신청자 대상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제* 적용대상별 지급요건 이행 및 사업기간 중 준수사항 충족 여부 확인(전산, 현장점검 병행)
 - * 소규모어가(어가당 연간 120만원), 어선원(연간 120만원, 1년중 6개월 이상 승선) 직불금 등
 -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지급 후에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예방
-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가어항 시설 보강 및 확충 추진
 - 국가어항인 천성항에 남방파제 건설*을 통해 항내 정온도 개선 및 어선통항 안전성 확보
 - * 남방파제 212.5m 및 북방파제 T.T.P 보강 등 / 289억원('24년 62억원) / '21.3.~'26.4.
 - '20년 태풍피해가 발생한 대변항 어항시설 복구, 기존시설 보강 및 부족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한 정비사업 계속 추진
 - * (태풍피해복구) 멀치틸이장 복구, 동방파제 보강, 내진보강 / 483억원('24년 73억원) / '21.11.~'26.11.
 - ** (정비) 남방파제 보강 260m, 소형선부두 303m 등 / 395억원('24년 25억원) / '22.12.~'27.11.
 - 노후·협소한 다대포항 시설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소요 부지 및 부두시설 확충을 통한 어항운영의 효율성 제고
 - * 어선부두 763m, 부잔교 2기, 준설 1식 등 / 492억원('24년 15억원) / '23.4~'29.12

◆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제주 바다 환경을 조성하여 보전

1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

-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캠페인 전개
 - (안전 캠페인) 대국민 대상* 해양활동 안전 홍보, 선사·선박 대상 출항 전 안전점검 철저 확인
 - * 해수욕장 이용객, 낚시어선 이용자 및 어선원 등 캠페인 대상 확대 실시(연4회)
 - (상시 홍보)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정보 및 해양안전관련 주제어 여객터미널 전광판 송출, 해양사고 예방 현수막 등 제작·게시*
 - * 청사, 제주항(2개소), 운진항(가파도선착장), 산이수동항(마라도가는 여객선) 총 5개소
- 인적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도·감독
 - (정보 공유) 여객선 안전관리 3대 협력기관(해사안전감독관, 운항관리자, 안전관리책임자) 협조체제 유지*
 - * 선박 및 육상 종사자의 안전관리 수행 능력 향상 및 전문지식 학습을 위한 정보 수시 제공
 - (해사안전 감독) 실효성있는 해사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·감독*
 - * 여객 집중시기 관계기관 합동 여객선 특별점검(5회), 정기 및 수시 선박(50회)·사업장(12회), 카페리화물선 등 총 228회 지도 감독
 - (실제훈련 등) 안전설비(구명 및 소화) 시연*으로 선원의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하고, 카페리여객선 선적 화물차량 불시 현장계근**을 통해 과적사고 예방
 - * 구명뗏목 투하 시연(2회), 구명 신호탄·소화기 사용법 시연(5척) 등 선내비상 훈련 지도
 - ** 화물차량 계근증명서 및 계량증명업 등록업체 발행여부, 계근 오차범위 확인(분기 1회)
-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 운항 지원
 - (특별교통대책) 여객집중시기(설, 추석, 하계휴가철) 특별교통 지원*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 뱃길 조성
 - * 여객선 특별교통 지원근무반 운영(3회), 특별교통 대비 여객선사 간담회 개최(2회)

- (현장점검) 여객선 **항로점검**(반기 1회), 여객선사 **간담회**(반기 1회), **여객이용시설*** 수시점검을 통한 현안 파악 및 여객서비스 개선

* 접안시설, 터미널, 이동로 등

○ 해양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**안전한 해양레저활동 지원**

- (**안전점검**) 수중레저업(234개소) 및 마리나업(15개소) 대상,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추진

* 수중레저업(스크류망 설치, 안전사다리 등), 마리나업(선박, 계류시설 등)

○ 제주기항 외국적 **크루즈선 안전운항 지원**

- (**항만국 통제**) 코로나19 이후 외국적 크루즈선의 제주기항 증가*에 따라 입항 선박 대상 **항만국통제(PSC) 국제안전기준 중점점검****을 통한 안전운항 지원

* 기항 횟수(선박) : ('20~'22) 없음 → ('23) 76(20개 선박) → ('24) 206(25개 선박) 예정

** 크루즈선의 짧은 정박시간(보통 8시간) 고려하여 입항 일정에 따른 점검반 구성(3인 1조)하여 현장 점검(선교·기관·선체) 소요시간 단축

2 항로표지시설 기능을 개량하여 안전한 통항환경 조성

○ 항로표지시설 적기 개량 및 항포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

- (**노후등표 개량**) 장기사용으로 노후한 **광포탄등표***(가파도 동측해상)를 개량하여 인근 통항선박의 안전확보

* 1994년 신설, 정밀안전진단 결과('18) C등급, 고립장애표지, 저수심(암초)지역 표시

- (**항포구 사각지대 해소**) 항포구 야간 입·출항 시 추돌사고(방파제 끝단의 경계수면 인지 곤란) 예방을 위한 **고효율*** 조명등 설치

* 전력 공급이 어려운 무인등대에 적합한 장비개발(소형·저전력·저비용·설치편의성)

- (**취약시설 개축**)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**우도등대 체험관을 부분 개축***(7.5억원)하여 등대방문 관광객에게 쾌적한 해양문화공간 제공

* (구조/준공년월/연면적/구역)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/ '05.2./ 164.6㎡/ 절대보전지역

- 항로표지시설 기능유지와 운영효율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
 - (정밀안전진단) 20년 경과된 표지시설의 보수·보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* 추진(50백만원)
 - * (진단대상) 수영곶등대 등 7개소(등대 5, 등표 2)
 - (시설물 보수) 유·무인표지의 구조물 안전점검 및 취약 시설물을 보수·보강*하여 주간표지 기능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(100백만원)
 - * 정기안전점검(83개소), 화도등대(진입로 복구), 무인표지도장(23개소) 등
 - (무인표지 통합관리) 항로표지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태정보 모니터링 확대 및 복합점검(점검정비+정보통신)으로 효율성 제고
 - * 제주권역 무인표지 원격관리 확대(62%→100%, '26년까지)

③ 밀입국, 테러 예방을 위한 항만보안활동 강화

- 항만보안 취약요인 개선 등 제주항 보안체계 확립
 - (보안심사) 항만시설(5개소) 정기 보안심사(연 2회)를 내실화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·발굴하고, 예방활동(보안시설·장비 점검 등) 강화
 - (상시 감시) 항만보안 종합상황실* 운영, X-RAY 검색 차량**을 활용한 정밀검색(트렁크 및 내부 적재화물)으로 항만보안 사각지대 해소
 - * 제주항 상황실에서 서귀포항(강정 포함)을 원격 감시
 - ** 차량형 X-ray 검색기(5대)를 활용하여 출입차량 검색으로 밀입국·테러분자 색출
 - (출입증 점검) 항만시설 상시출입증 관리실태 일제점검(연 1회)을 통한 항만시설 출입자 관리와 출입증 부정사용 예방
- 위기상황 대응 교육·훈련 등을 통한 항만보안 종사자 역량강화
 - (위기대응) 테러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*(분기 1회), 실사격 훈련(연 2회), 가스분사기 훈련(연 1회) 실시
 - * 무사증이탈, 월담 등을 대비한 모의 시나리오훈련 중점 실시
 - (직무역량) 항만보안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청원경찰 직무교육(월 1회), 항만방호 합동훈련(연 2회) 등 실시

4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

-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지원, 무인도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제주 연안 및 해양생태계 등 보전활동 강화
 - (해양 및 습지 보호구역) 제주도와 협력하여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*을 수립하고, 해양보호구역(3개소)** 관리 강화
 - * 오조리 습지보호지역(주변 갯벌) 신규 지정('23.12., 습지보전법 제8조)
 - ** 해양보호구역 : 문섬('02.11.), 추자도('15.12.), 토끼섬('16.12.)
 - (무인도서 점검) 무인도서*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정화활동 지원 및 해양쓰레기 수거·처리
 - * 미역섬 등 12개소(추자면 영흥리 7개소, 추자면 예초리 5개소)
- 해상풍력 및 소수력 발전 등 해역이용협의*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 강화
 - (사후관리) 처분기관(지자체 등)의 해역이용 협의의견 이행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고(연 1회 이상),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병행 실시
 - * 해양을 이용·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·평가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제도
- 제주 남방 큰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호활동 추진
 - (보호활동) 제주남방큰돌고래 지킴이* 운영을 통해 관찰가이드 이행 여부 승선점검 및 홍보활동(돌고래 보호엽서 배부, SNS 홍보) 강화
 - * 제주단 직원 2인 1조로 선정, 연 2회 이상 점검 및 홍보